

정책브리핑



정책브리핑 | 2024-10호 | 2024년 5월 21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이한주 | idp.theminjoo.kr

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: 「소상공인 활력 회복법」

정 상 희 수석연구위원 (경제학 박사)

《 요 약 》

■ 22대 총선은 민생경제 회복에 전념하라는 국민들의 경고

- 22대 총선에서 민생이 가장 큰 투표요인으로 실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
 - 민생경제 회복의 출발점은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를 위해 필요한 소비활성화, 소상공인 고정비용 부담완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‘소상공인 활력 회복법’으로 통합

■ 「소상공인 활력 회복법」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

-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활력회복 필요
 - 2023년 3/4분기말 소상공인 대출규모는 1,000조원이 넘어선 가운데, 취약차주수는 38.9만 명이며, 이들의 대출잔액은 116.2조원일 뿐만 아니라 대출 연체율도 1.24%로 지속 상승
- 민생경제 회복의 출발점은 골목상권 활성화
 -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 고정비용 등 부담완화 방안 마련 시급
-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을 통한 소비활성화
 - 코로나시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
 -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통한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며, 지원금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까지 살릴 필요가 있음
-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정부지원 의무화
 - 지역에서 체감도가 높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정치적인 이해에 관계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통한 정부 지원 의무화
 - 지역화폐 발행 예산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 설치
- 소상공인 고정비용 절감을 통한 매출회복 지원
 - 임대료 부담 완화: 무이자 또는 저금리 임대료 지원, 관리비를 통한 임대료 인상 방지 등
 - 이자비용 부담 완화: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, 장기·분할상환 대출 등
 -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: 에너지바우처 신선,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지원 등

♣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I. 22대 총선 평가

○ 22대 총선은 말로만 민생을 외친 정부·여당에 대한 심판 선거

- 22대 총선은 민주당의 단독 과반과 범야권으로 확장하면 198석을 차지한 반면, 여당은 108석에 그쳐 정부·여당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할 수 있음
- 이와 관련하여 이번 총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민생문제와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을 투표의 주된 이유로 답변
 - 4월 3주 전국지표조사(NBS) 결과에 따르면 총선 투표에 영향을 미친 주된 이유로 물가 등 민생현안(30%), 정부여당 심판(20%) 순으로 응답
- 이번 총선이 정부·여당에 대한 심판이지만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 전체 득표율 차이는 5.4%p 수준일 뿐만 아니라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또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도 일정 부분 심판한 선거라고 볼 수 있음
- 즉, 이번 총선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민생경제 회복 등 국민을 위한 정치에는 망설임 없이 전념해야 할 것임

II. 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

○ 22대 국회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념해야 하며, ‘소상공인 활력 회복법’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제안하고자 함

- 민생경제 회복은 골목상권 활성화 → 지역경제 활성화 →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진행되어야 상대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, 이에 따라 그 출발점인 골목상권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됨
- 특히, 소상공인은 골목상권에서 생산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는 소비활성화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임
 -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년 3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7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, 간단하게 우리나라 인구의 10% 정도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소비자의 역할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음
- 따라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비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 고정비용 부담완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 ‘소상공인 활력 회복법’으로 통합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

■ 소상공인 활력 회복법의 필요성

○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소상공인 활력회복이 필수적이며 현재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

-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(2023.12)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1,000조원이 넘어선 가운데,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대출금액 및 대출 비중 상승 등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
- 2023년 3/4분기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,052.6조원
- 해당 분기 기준 자영업자 취약차주수는 38.9만명이며, 이들의 대출잔액은 116.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, 취약차주 비중은 차주수 및 대출잔액 기준으로 각각 12.4%, 11.0%로 2022년말(11.0%, 9.8%) 보다 상승
- 이와 함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내수경기 불황으로 인해 매출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줌에 따라 매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
- 2023년 3/4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.24%로 2022년말(0.69%) 대비 0.55%p 상승
-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연체차주들이 보유한 대출 비중은 2023년 3/4분기말 2.47%에서 전년 말(1.35%) 대비 1.13%p 상승하여 연체차주들의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
- 최근 대출 연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서 NICE 평가정보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대출금을 3달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 수는 7만2,815명으로 2023년 말 6만1,474명보다 18.4%(1만1,341명) 증가한 나타나 대출금 상환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

○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소비활성화 유도과 함께 소상공인 고정비용 등 절감방안 마련 필요

- 고물가 등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 감소는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을 야기시키며, 소비 감소는 골목상권의 매출을 감소시키는 악순환 발생 가능성을 키움
- 특히, 선거가 끝난 이후 에너지, 교통요금 등의 인상을 비롯하여 각종 먹거리에 대해서도 가격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가게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
- 소비감소가 소상공인의 매출감소와 직결되는 상황에서, 고정비용 문제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
- 따라서 소비활성화를 통한 매출회복과 함께 고정비용 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환경 마련과 함께 이를 통한 골목상권 회복 필요

- 특히, 윤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매출회복과 고금리 등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언급한 점과 정책시행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안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
- 정책을 시행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에서 이제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민생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

■ 소상공인 활력 회복법 : ①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

- (내용) 지난 코로나시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추가적인 소비 유인을 통해 소비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처럼 실질소득 감소를 보완하고, 추가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1인당 25만원 수준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
 -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정부분 해석에 주의를 요하고 있지만,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금액은 1인당 약 11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추가적인 소비효과가 일정부분 발생¹⁾
 - 국회예산정책처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카드사용분 9조5천59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최대 17조3천405억원으로, 약 1.81배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²⁾
 - 즉,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활성화를 비롯하여 경기회복에도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임
- (추진방안)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빠른 추경편성을 통해서 시급히 추진해야하며, 이때 지급되는 지원금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여만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취지까지 살릴 수 있음
 - 이전 코로나시기 긴급재난지원금은 광역단위로 사용하는 형태의 광역 지역화폐라고 할 수 있으며,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역화폐 지급
 - 추경편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해서 지급

1) 경제인문사회연구회(2021), 코로나19의 사회·경제적 영향 분석 및 「긴급재난소득」의 효과 평가 연구.

2)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실 의뢰로 2020.11.25.일 보고서 내용 발표

■ 소상공인 활력 회복법 : ②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정부지원 의무화

- (내용)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별다른 민생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2024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삭감 하였지만 민주당의 노력으로 3천억원 지원예산 편성
 - 이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편성의 관점이 민생회복 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
 - 즉, 지역화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하여 큰 성공을 거둔 민생정책으로 정부여당은 ‘지역화폐=이재명’이라는 논리로 접근하여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판단됨
- (추진방안)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충분히 자생력을 가지고 운용되거나 정부지원 예산규모가 일정액 이상이 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의무화
 -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예산지원방안 마련 의무화
 -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기금조성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중앙정부 또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

■ 소상공인 활력 회복법 : ③ 소상공인 고정비용 절감을 통한 매출회복 지원

- (내용) 소상공인의 매출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료, 이자비용, 공과금 등 고정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경영에 큰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
 - 소비활성화 → 매출증대 → 고정비용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
- (추진방안)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, 이자비용 절감, 전기요금 등 고정비용 절감
 - (추진방안1)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 편성을 통해 무이자 또는 저금리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및 ‘임대료 분담제’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, 특히 편법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리비를 통해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

- (추진방안2)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절감을 위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, 장기·분할상환 대출프로그램 도입 등 금융정책 확대가 필요하며 추경을 통해서 관련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것임
- 이와 함께 정책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에서의 불이익 방지방안과 함께 소상공인의 최후보루로 활용되고 있는 고금리 보험약관 대출에 대해서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
- (추진방안3)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,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 포함 그리고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 및 제도 개선 추진
- 마찬가지로 건물 유희공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혜택을 임차인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부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완화 지원

Ⅲ. 22대 국회: 민생에는 여야가 없는 국회

- 22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
 - 여야가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음에도 그 끝은 민생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22대 총선에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함
 -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22대 국회에서도 국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준 것은 민생회복을 위한 과제에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요구이며,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임
 - 여당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의 패배의 핵심 원인이 민생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민생 정책에는 당연히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하여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해야 할 것임